

# 뿌리깊은 검경 불신... 수사권보다 신뢰회복 '급선무'

## 수사권의 미래

검경의 미심쩍은 수사과정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수사권 조정보다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무죄'를 확정받은 홍기해(31) 씨는 5일 국가배상 1억원 청구소송을 시작했다. 피고는 대한민공과 사건을 담당했던 박모 검사, 경찰관 2명이다. 홍씨는 이들 각각에 1억원과 2014년 4월 18일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했다.

홍씨는 2014년 4월 MBN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양경찰장장, 해양경찰과 현장 구조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해 5월 기소됐다. 홍씨는 1·2심은 물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2014년 4월 21일 새벽 체포된 홍씨는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101일간 구속됐다.

홍씨 측 변호인 양홍석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홍씨가 해경이 민간 구조사의 구조활동을 막았다는 취지로 인터뷰해 유언비어를 우려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경찰의 설명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 '해양경찰장장

김학의 증거누락·염전노에 사건 등 수사기관 강약약강 수사에 신뢰 독

상호불신 해소 없는 수사권 조정 독靑 "국회 공수처도입 법안 통과 촉구"

이 민간구조사의 구조활동을 막았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상 해경장은 검찰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근거를 잃었다고 평가받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현장구조대원들' 역시 해경·해군·소방방재청·공군·경찰·전남도청·완도군청·민간선박과 잠수부 등으로 광범위해, 검경이 피해자 특정도 하지 않은 채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2014년 4월 당시 홍씨가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이 연타이 달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론에 밝히고 체포영장을 받아낸 점도 석연치 않다고 양 변호사는 밝혔다. 주거가 일정하고 경찰과 출석 일시를 정한 홍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약자 인권 유린 돕거나 외면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기해(31)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날인 4일에는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3만건이 넘는 디지털 증거를 누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밝혔다. 조사단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포렌식으로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 등이 송

치 누락된 경우를 13일까지 제출하라고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이 이유 없이 증거를 누락했겠느냐는 반론도 이어졌다.

간지를 배려한다는 의혹을 사온 검경은 약자에게 냉정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11월 승소한 '염전노에' 국가 배상 항소심 판결문은 인권유린에 가담·방조한 경찰의 실상을 보여준다. 최모(58) 씨는 2010년 3월 염전주 박모 씨가 휘두른 칼에 허벅지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지만, 다음달 섬에 돌아와 일해야 했다. 신의파출소 경찰이 최씨의 신고 내용을 믿지 않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4년 염전노에 사건이 불거진 이후 수사에 돌입했다. 박씨는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와 횡령죄가 인정돼 2017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검사 역시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에 따르면, A 검사는 2017년 지적장에 3급인 피해자 서모 씨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1500만원 대여금을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불기소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지난해 8월 검찰이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거나 묵인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서로 믿는 검경, 국민은 "공수처 만들라"

검경 간 상호 불신도 문제로 지적된다. 두 기관을 관할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월 정부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상대 기관에 대한 비방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수사·정보기능을 가지면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처럼 된다는 취지로, 경찰은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과 재판단계 권한을 가져 후진적이라고 비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기관 간 책임의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고검 산하 위원회에 영장 청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경우 전문성을 가진 검찰의 책임감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기존 수사기관·제도가 신뢰를 잃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22일 공수처 신설 청원 답변에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법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캠퍼스에 찾아온 봄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5일 오전 대구 북구 북현동 영진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이 꽃망울 터뜨린 목련을 감상하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뉴스1

## “고교교육 기여대학 68개교에 559억 지원”

교육부, 학종 공정성 평가 강화키로  
중간평가서 10개교 탈락, 신규 선정

대입 전형을 개선해 고교 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부 지원사업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올해 68개 내외 대학에 559억 원을 지원하는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 전형을 개선해 고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선정 대학에는 입학사정관 등 평가전문인력 인건비, 대입전형 운영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대입전

형 개선 연구비 등이 지원된다.

올해는 지난해 선정돼 사업을 수행중인 대학(2018~2019년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를 해 하위 10개 내외 대학은 지원을 중단하고, 평가 상위 58개교 내외는 계속 지원한다. 또 신규 10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등 총 68개교 내외를 지원한다.

올해 추가선정평가에서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중 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평가 기준 공개 확대 ▲대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배점도 상향한다.

사업지원 유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 I' 62개교 내외와 지방 중 소형 대학(모집인원 2000명 이하 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 소재 대학) 6개교 내외

를 '유형 II'로 선정해 지원한다.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국고 지원금의 10% 이상은 대학이 대응투자해야 한다.

교육부는 8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내용을 대학에 안내, 평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8일까지 예비접수를 하고 사업신청서 접수(~4월15일) 이후 4~5월 중간평가 결과를, 6월 중 추가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업을 통해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이나 특기자전형 감소,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고른기회 선발 확대 등 기존의 대입전형 개선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학종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학이 학생 평가 관련 절차와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한용수 기자 hys@

## 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

유은혜 "교사의 명예회복 계기 되길"

교육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했다. 5일 교육부는 이날 검찰청에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취하서에서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본다"며 고발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26일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에 대해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했다. 하지만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징계 요구 중에 있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13일 교사 43명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냈다. 이후 같은 달 28일 교사 80명이 2차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6월엔 교사 161명이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문을 신문광고로 내 참사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이에 당시 교육부는 그해 6월 26일 정치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교사 284명을 대검에 고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발 취하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내고 "이번 고발 취하는 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간의 고통을 돌아볼 때, 매우 늦은 결정이다"면서도 "이제라도 교육부가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해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고발을 취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軍,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으로 감시 강화

방사청, 에스원과 275억 사업체결

방위사업청은 ㈜에스원과 275억 원 규모의 과학화경계시스템 2차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5일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요시설에 주·야간 경계 임무가 가능한 감시/감지/통제시스템을 통합한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방사청은 적은 인력으로 효과적인 경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는 2차 사업은 1차 사업보다 성능이 향상된 과학화경계시스템이 구축된다.

지능형 탐지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영상분석 서버가 침투 및 위해행위를 탐지하고 감시병에게 경고해준다. 주·야간 및

안개, 해무 등 악천후 시에도 감시가 가능토록 시스템도 추가 개선된다.

방사청은 드론 탐지레이더가 시범적으로 설치돼, 부대별 경계 취약점을 극복하고 적의 침투 및 테러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군 일각에서는 과학화경계시스템과 병행해 군견 등 생물장비가 추가로 도입되는 방향도 검토되어야 할 것 이란 주장도 나온다.

수의병과 출신 예비역 영관장교는 "외국의 경우 군견을 k9이라는 병과로 제정해, 과학화 장비와 보조를 갖추고 있다"면서 "기술과 동물의 본성을 합친 하이브리드형 과학화경계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

## 병무청 "병역의 의미 고취" 나라사랑 이야기 공모

병무청은 5일 병역이행의 의미와 조국애를 고취하고자 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자원병역이행자는 외국 영주권자 등 병역법상 현역병 입영의무가 없음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질병이나 학력의 사유로 보충역 등의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현역병으로 복무 또는 전역한 사람이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자원병역이행자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자원병역이행 과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산문과 만화(카툰)다. 이며, 분량은 산문의 경우 A4용지 3~4매, 만화는 12칸 이내다. /문형철 기자